

#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 평가와 현 정부의 과제

전 영 평 / 대구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김영삼 정부는 교육 민주주의의 토대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했으나, 교육현장의 협조를 얻지 못한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인 제도의 도입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신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교육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타당한 평가체제 및 보상제도 확립, 국·공립 교육기관 구조조정, 교육재원의 효과적 활용, 시민단체와의 교육서비스 협동 생산, 교육민주화 완성 등이 그것이다.

## 1. 들어가는 말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교육 개혁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대에 설계된 교육 개혁 과제를 대부분 계승한 것이거나, 약간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첨가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게 되는 이유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교육 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온 실무 교육 관료들이 여전히 신 정

부의 교육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 관료 중심의 교육 정책이 수립, 집행될 수 있는 배후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놓여 있다. 확실히 이러한 변화는 교육 정책을 정권 유지 차원에서 관리하던 군사 정권 시절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소수 교육 관료의 손에서 만들어진 교육 정책 중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다. 정책은 어차피 가설(hypothesis)임에도 불구하고(Landau, 1977) 교육 정책가들은 자신의 판단을 수시로 검증받

으러 들기보다는, 미리 계획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치중하였기 때문에 교육 현장을 무시한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분야에 대한 무분별한 시장 원리의 도입이었다. 한국의 교육계는 전형적인 시장 실패 분야이다. 대부분의 사학들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교육을 담당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시장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문제는 시장 원리라는 것이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 시민들과 일부 언론들에 의해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정책가들의 이러한 결정은 대학간 무리한 경쟁을 부추기고, 규제 완화라는 명분 아래 부실 대학과 학과를 양산하였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는 대학에만 지원금을 주는 신종 규제를 만들어 냈고, 학부제와 다학과 모집의 강요를 통해 대학과 학문의 뿌리를 흔들며 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학 비리의 감독은 소홀히 한 채, 양적 지표에 의존한 교육 성과만 중시하는 등 전시적인 정책을 교육 현장에서 계속 실험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김영삼 정부 이후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을 그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고찰하고, 앞으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 개혁의 과제가 어떠한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 2. 김영삼 정부의 대학 정책

김영삼 정부의 교육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과거 정권과 구분되는 업적은 교

육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실천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이다. 정권과 손잡은 교육 기득권, 그리고 각종 규제와 권위주의를 동원하여 부조리와 비민주주의를 교육계의 관행으로 정착시킨 교육 행정부처간의 굳건한 3자 연대를 혁파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는 교육계 내부의 민주화 요구에 부응하여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파행적 운영에 대한 조치도 취하였다. 비리와 파행으로 치닫던 몇몇 사립학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여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는 성과를 올린 것도 사실이다. 또한 교육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개혁성 있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하였으며 대다수의 전교조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고, 시·국 관련 및 경제 사정 제적생을 복직시킴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영삼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을 통해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성 확대를 시도하였다. 학점은행제, 시간제 학생제, 전·편입 기회 확대, 대학설립 준칙주의, 학부제, 다전공제, 연구중심대학 육성 등 수많은 과제들이 수요자 선택권의 확대와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시되었다. 교육 여건 개선과 관련한 개혁으로는 GNP 5% 투자 확보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운영(매년 1조 원), 사학에 대한 재정·금융 및 세제상 지원, 사학의 전문 경영 체제 육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각종 평가 제도의 도입을 통한 개혁은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 교수업적평가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치 운영 등도 실시하였다(교육부, 1997).

### 3. 대학 정책의 문제점

교육 정책가들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만들어 낸 교육 개혁의 메뉴는 매우 포괄적이고 의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망라적인 정책 메뉴의 개발과 교육 개혁에 대한 비현실적인 관점의 도입 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① 수요자 중심의 교육 및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가 극히 제한적인 부분에서만 허용되어 근본적인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민간 부문의 취약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일어난 부문이며,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 서비스의 생산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도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담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 교육 사업을 진작시켜 왔다. 이로 인해 현재의 한국 교육은 혼합식 교육 체제를 가지게 되었으며 일방적인 시장 논리나 정부 개입의 논리가 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일류 학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학교 교육의 핵심은 일류 학교의 입학에 맞추어졌다. 중·고등학교의 평준화로 인해 중등교육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었으나, 대학에서는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학교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 이 상황에서 교육 수요자의 관심은 전공이 아니라 대학 명칭에 쏠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수의 일류 대학 출신만이 우대 받는 사회에서 학습된 결과이다. 따라서 서열화된 대학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 없이 수요자 중심의 전공 선택이나 대학 입학의 수요만을 충족시

키는 일은 교육 수요자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다학과 모집, 학부제 실시, 다전공제 등의 실시는 의학, 약학, 특성화 학과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수요자 선택의 확대라는 말도 무색해지고 있다.

②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만든다는 명분 아래 선택 폭을 다양화하고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하였으나, 평가와 재정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교육부의 의도대로 교육의 체제를 바꾸어 가는 신종 규제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수반하게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물의를 빚고 있는 다학과 모집 방안(여러 개의 학과가 신입생을 통합 모집하고, 학생들은 학과나 학부에 원칙적으로 소속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은 교육부의 권장 사항 같지만 사실상 강요 사항(이를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이다. 다학과 모집은 그 실시 때 따른 학생들의 수용, 강의 인력의 수급, 강의실 마련과 학생 평가의 변화, 학점 취득의 용이성과 인기 학과 중심의 전공 선택, 정보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선택자의 혼란, 비인기 과목 및 전공의 폐지, 그리고 교육자의 신분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학과 모집을 완고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향후 많은 비용과 저항을 수반하게 될 전망이다.

③ 교육부가 주도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란 단지 교육부의 입장에서 본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개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실 지금의 교육 개혁이 교육 수요자의 진정한 요구를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호평 지향적 정책 동기(credit claiming

motivation: Weaver, 1986)를 가지고 일부 개혁주의자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를 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육 방식이 교육 수요자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또 새로운 제도가 교육 수요자에게 어떤 구체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한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교육 수요자를 위해 필요한 변화라고 하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다.

④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중점 육성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 이른바 명문 대학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하고, 하류 대학에는 소규모 지원으로 일관함으로써 대학간 격차를 심화시켰다. 교육부는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경쟁력 차이에 따른 자연 도태를 교육 개혁의 요체로 보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연계시키고 있지만, 이미 서열이 정해진 대학들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교육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⑤ 교육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지만 그것이 교육의 질 향상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윤정일, 1998). 현재까지 엄청난 숫자의 교육 개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합리적 평가 체제를 수립하지 못한 채 백과사전식 나열에 그치고 있다.

⑥ 지난 수년 동안 수도권 근처의 대학이 크게 부상하고 지방 대학이 급격히 쇠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교육 개혁은 수요-공급, 경쟁력, 선택 등 경제적 논리만 앞세워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방관하고 있다.

⑦ 교육 현장을 개혁하기 위한 교육민주

주의의 제도적 정착과 추진에 소극적이다. 교육민주주의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인정되나 이를 강력하게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부는 아직도 사립대학 교수협회의 공식화와 같은 현장 중심적 교육 민주화 제도 마련에 매우 냉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⑧ 대학 개혁의 논리를 필요한 인력 공급과 취업 가능성에 맞추는 바람에 대학이 취업 학원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순수 과학이나 인문 과학 등 학문의 토대가 되는 기초 분야의 교육이 기형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⑨ 세계화, 국제화, 정보화를 앞세운 갑작스러운 시장 개념의 도입으로 교육이 마치 소비자와 생산자,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 대상으로 오인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교육자와 학생 간의 관계가 변질되고 학생 상호간에도 상업적 경쟁이 우선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⑩ 교육 수요자의 수용에만 치중하여 교육 기회의 양적 확대와 교육 기관의 양적 팽창만을 초래하였을 뿐, 교육자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부가 평가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그나마 규제 완화를 이유로 대학 자체에 평가를 위임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 4. 김대중 정부의 대학 정책과 개선 방향

신 정부는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강력한 교육 개혁 의지 표명, 개혁적인 장관의 임명, 교육부의 기구 축소 등의 노력을 보여

주었다.\* 신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전국적인 교육개혁 추진기구 발족 : 5월 중 교육개혁추진중앙협의회(40명)를 대통령 직속자문기관으로 구성
- 교육개혁지원위원회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위원-각 부처 장관
- 지역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설립 : 촌지, 불법과외 근절 운동, 교육관련 고충 상담
- 사교육비 경감 : 단기적으로 불법과외 단속, 중·장기적으로 공교육 강화 및 대입제도 개선
- 정보화 교육 강화 : 정부의 정보소양인 증제 도입-교사, 학생 정보화능력 평가
- 실직자 지원 확대 : 산업대, 전문대, 실업고에 특별 과정 신설
- 학급당 학생수 감축 : 2002년까지 초등학교 35.7명→30명, 중학교 43.4명→35명, 고등학교 52.6명→40명
- 대학교육 질 향상 : 올해부터 사립대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제 도입, 사학 긴급융자제 도입, 학과·단과대·대학원 통폐합 구조조정, 기초 첨단 분야 이공계 대학 집중 육성
- 교직제도 개선 : 수석교사제 도입, 계약직 교사 임용 확대-교직사회 개방
- 행정조직 개선 및 재정 효율성 증대 : 시·도교육청 총 정원제 및 표준조직제 도입

한편, 교육부 장관은 취임 직후 ① 서울대 등 일류 대학의 정원을 총 1%로 제한, ② 연구 중심 대학 및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 ③ 불법 과외 금지, ④ 사교육비 및 촌지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⑤ 교육청별 예산 차등 지원 : 비효율적 예산 집행에 대한 불이익 차원, ⑥ 학교위원회의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하였으며, 향후 서울대 무시험 입학, 교장추천제 입학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 정부의 이러한 정책 설정은 IMF시대의 실직자 교육 지원을 빼고는 실제로는 지난 정부 시대의 교육 정책과 거의 비슷한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대에 이미 교육 개혁의 주제들이 거의 대부분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교육 개혁의 주제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 신 정부의 교육 개혁 기본 방향이 문민 시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점,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비전문가인 관계로 실질적인 교육 개혁 정책의 설정과 운용은 관료들에 맡겨져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 더욱이 김영삼 정부 시대의 교육 정책이 보여 준 나름대로의 성과는 갑작스러운 교육 정책 변경으로 인한 혼란의 부담을 신 정부에게 지우게 할 것이다. 따라서 신 정부의 교육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대의 교육 정책의 기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현재의 교육 정책가들이 추진하는 대학 정책은 실행상의 많은 문제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신 정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

\* 이 외에도 신 정부는 100대 공약 중 다음과 같은 5개의 교육관련 공약을 하였다. ① 학생 위주의 교육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및 다양성 계고, ②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추진, ③ 교원 근무 여건 개선 및 인사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 ④ 교육부문의 효율성 계고 및 교육 자치기반 조성, ⑤ 산업수요에 맞는 산업교육체제 구축.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교육 정책 수행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타당한 평가 체제의 확립과

#### 보상 제도 확립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부분은 교육 평가의 부재와 부실이다. 교육의 질은 평가와 직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는 매우 부실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그 운영도 형식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평가의 대상은 교육 현장(예 : 학교), 교육자(교수, 교사), 교육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도 타당한 평가 제도를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문민 시대에 들어 대학 종합 평가 및 교수 평가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평가 주체의 설정, 평가 기준과 평가 내용의 부적절성 등으로 인하여 평가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현장에서는 평가 대비 행정이 난무하고 있으며, 양적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질적 향상 노력을 포기하는 경향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평가와 지원을 연계한다는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더욱 왜곡되고 있다. 신 정부는 관료화된 현행 교육 평가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그에 따른 보상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의 역할도 현재와 같은 불필요한 각종 행정 규제 업무의 수행자에서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 척도의 개발자, 평가 제도의 운영자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 2) 국·공립 교육 기관의 구조 조정

해방 이후 한국은 민간 분야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국가가 교육 서비스 공급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사립 학교들이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지역에까지 국·공립학교를 설립하여 교육 시장의 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에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등록금은 사립학교의 절반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올바른 경쟁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뻔하다. 또 국·공립 대학의 증가는 교육부 직원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적으로도 세금을 낭비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IMF를 맞아 대부분의 사립 대학들은 학생 부족으로 구조 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국·공립 대학은 국가의 비호 아래 아무런 존재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신 정부는 꼭 필요한 국·공립 대학 몇 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학은 민간에 처분하여 제대로 된 경쟁을 촉진하고 예산을 아끼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교육 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낭비 방지

김영삼 정부는 교육 재정을 GNP의 5%로 끌어 올렸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액수의 교육 재정이 확보되었지만 교육 재정 지출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거의 안 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엄청난 재원의 사용 용도에 대한 검토와 이미 투자된 재원의 효과성을 검토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자 재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는, 어떻게 재원을 배분하는가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미 지출된 재원은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는 특정 학교에는 지나치게 많이 배정되며, 그렇지 않은 학교에는 기초 교육 자원조차 배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교육정보화, 멀티미디어 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못하면서, 컴퓨터 및 시청각 설비 등에 엄청난 액수의 돈을 쓰고 있다. 신 정부는 교육 개혁을 위한 재정 자원의 확보보다는 이미 건혀진 재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에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 엄밀하고도 정확한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 4) 시민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 서비스의 협동생산

교육은 자발적 민간 단체와의 협동을 통해 상승 효과(synergy effects)를 거둘 수 있는 전형적인 분야로 알려져 있다(Brudney,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교육 서비스는 정부와 학교의 주도로 공급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 교육 인력들은 교육이라는 가치재의 생산과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생겨난 많은 시민 단체들은 정부와 학교 중심의 교육 행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교육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시민 단체의 이러한 요구는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정부 실패를 수정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신적 의미를 갖는 것이다. 신 정부는 교육서비스의 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과 협의하여 공동 생산(coproduction)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5) 교육 민주화의 완성

김영삼 정부 시대의 교육 개혁은 교육 현장에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 현장에는 비민주적 제도와 관행이 남아있다. 또 사립학교법도 개정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비민주적인 횡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교수의 교권과 권익을 수호하며 대학 행정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교수협의회를 공식화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신 정부는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교육 악법들을 민주적인 입법으로 대체하고 교수협의회와 같은 민주적 자생 조직을 공식화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무사안일과 비효율의 근원인 교육 권위주의를 근원적으로 타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교육 자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고객 중심적 교육 서비스 체계를 고안하여 민주적인 교육 현장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도 수립하여야 한다.

#### 6) 교육부의 개혁과 개편

신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교육부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또한 교육청의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제를 실시하겠다는 발표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대한 규모와 불필요한 기능 수행에 대한 비판은 교육부 폐지론이 등장할 정도로 심각하다. 규제 중심의 교육 행정으로 인해 방대해진 교육부의 조직과 인원은 엄밀한 업무 평가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로 간소화되어야 한다. 자기 조직의 이익과 편의만을 추구하는 관료제의 내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관료들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정책 실명제, 정책 미개발 추궁제, 교육 민원 책임제의 실시와 더불어 유능한 공무원들이 보상받고 승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평가 제도의 수립이 시급하다. ■

(참고문헌)

교육부(1998). 『교육개혁추진성과』.

윤정일(1998). 새 정부의 대학 정책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92. 서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96~101.

Brudney, J. L. (1990). *Fostering Volunteer Programs in the Public Sector*.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Weaver, R. K. (1986). The Politics of Blame Avoidance. *Journal of Public Policy* 6 : 371~398.

Landau, Martin(1977). The Proper Domain of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423~427

---

전영평/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niversity of Georgia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정책학회 편집위원과 대구경실련 정책위원장을 역임하였고, 『대학행정개혁 : 생존과 번영을 위한 대안』, 『관료제』(역서), 『행정학의 주요이론』(공저) 등의 저서와 "지방화 시대의 환경의식과 규제방안",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전략의 평가"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